
일반논문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분신자살(焚身自殺)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

대기업 노조의 비정규 노동자 배제

한국의 국민형성과 ‘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1960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논문요약〉

근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다수결의 정치’이다. 보통 인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다수결의 정치는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다수결의 정치가 지배적 사회·정치 원리로 관철되면서 다수자를 재현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근대 이후 다수자를 표현하는 개념 또는 용어는 매우 다양했다. 민족, 국민, 인민, 백성, 서민, 대중, 시민 등등이 다수자를 재현하는 유력한 용어들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은 근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집단 주체 개념 중의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민중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대는 1970년대로 얘기된다. 비판적 지식인 사회 중심으로 1970년대에 민중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960년대 민중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1970년대의 민중론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확산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1960년대 지식인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집단주체는 국민, 대중, 인민, 민중, 서민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운동 또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주로 호명되었던 것은 대중, 민중, 서민, 국민이었고, 이론 또는 이념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인민·국민·민중이었다.

민중은 다양한 경쟁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었다. 비슷한 계열로 대중, 인민, 국민, 서민과 경합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민족과 밀접한 관련 하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인, 엘리트, 특권층 등 지배층을 지칭하는 개념과 수직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렇게 중형으로 연결된 개념들의 그물망 속에서 민중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민중은 지배층의 용어이자 저항 진영의 집단주체로 호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1965년을 전후해 박정희 체제는 더 이상 민중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저항진영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 이유는 1965년 민중당의 창당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야당 당명으로 민중이 사용되면서 박정희 체제는 민중 용어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잡지 『청맥』은 1965년을 전후해 민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민중 용어는 피지배층 일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주종이었지만, 『청맥』의 일부 필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이진영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 민족의 실체, 민족문화의 실질적 담지자, 현실 변혁의 핵심 역량 등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진영도 민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재하여 엄밀한 개념으로까지 정립시키지는 못했고 또한 여전히 계몽주의적 태도를 완전히 탈각하지도 못했다.

■주요어: 민중, 청맥, 지식인, 집단주체, 국민, 대중, 이진영

1. 머리말

근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다수결의 정치'이다. 보통 인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다수결의 정치는 정

치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다수결의 정치가 지배적 사회·정치 원리로 관철되면서 다수자를 재현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즉 스스로를 압도적 다수자로 재현하는 것이 지배와 저항을 막론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곧 ‘재현의 정치’ 이기도 하다. 다수자로 호명된 집단주체는 사실상 수많은 차이의 소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차이는 소거될 수 없으며 동질적 집단주체는 오직 담론적 재현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정치란 곧 이러한 현실적 차이와 담론적 재현 사이의 간극과 긴장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재현의 정치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담론적 재현은 계몽기획과 연루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 차이를 소거(망각)하고 이상적 집단주체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곧 특정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주체화는 계몽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민족적 자각, 국민적 각성이란 곧 계몽기획의 집단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현의 정치는 현실에서 대의정치로 표상된다. 정치는 곧 지역구민 또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주장되었고, 집단 주체는 오직 정치가를 통해 대변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다. 대변의 주체와 대상 간에는 비대칭성이 개재될 수밖에 없기에 대변은 곧 개별자 모두의 대변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대변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는 오직 추상으로만 가능하기에 대변은 전체를 재현하는 담론적 실천을 수반하게 된다. 다수자로서의 집단주체는 이러한 담론적 재현의 산물일 것이기에 구성적 개념이 된다.

근대 이후 다수자를 표현하는 개념 또는 용어는 매우 다양했다. 민족, 국민, 인민, 서민, 대중, 시민 등등이 다수자를 재현하는 유력한 용어들이었다. 형식논리적으로 민족, 국민은 내부 분할이 없는 전체를 지시하는 개념이지만 국민은 일정한 법률적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달리 인민, 서민, 대중, 시민은 전체가 아닌 전체 속의 다수자를 지칭한다. 요컨대 사회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 다시 말해 피지배층 일반을 지칭한다. 물론 인민과 시민은 지배-피지배의 경계선상에 위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인민의 지배가 주장되거나 지배계급으로서의 시민 계급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중이다. 민중은 근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집단 주체 개념 중의 하나였다. 민중은 일제시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민중론이 본격 제기된 시대는 1970년대로 얘기된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경향도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¹⁾ 민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1970년대 지식인 집단의 민중인식은 이러한 배경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는 1970년대의 직전 시기로서 1970년대 민중인식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1960년대 민중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제시기 이래 민중은 지배층과 저항진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단 주체 개념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지배대상을 민중으로 호명하였고, 저항운동 진영 또한 민중을 사용해 집단주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에서 사용된 '민중직접폭력혁명' 이 그 대표적 예였다. 해방 이후에도 일정한 혼용이 있기는 했지만, 좌익의 집단주체가 인민으로 집중되면서 민중은 우익과 미군정의 용례로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강화되어 '민중의 지팡이' 라는 경찰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민중은 저항주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수동적 '대중' 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함석헌 등 일부 논자들이 민중을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가진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1950년대까지 민중이 역사의 주체, 또는 정치적 저항운동의 주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 민중론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박은숙, 2008, "동도서기론자의 '民富國強' 론과 민중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전명혁, 2008, " '민중사' 논의와 새로운 모색," 『역사연구』 제18호; 장훈교, 2008, "공간적 은유의 전환," 『역사연구』 제18호; 장상철, 2007,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재등장,"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허영란, 2005,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역사문제연구』 제15호 등이 있다.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민중이 저항운동 진영의 집단주체 개념으로 부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민중이 지배의 언어에서 저항의 언어로 서서히 중심이동하고 있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요컨대 1960년대 민중인식의 변화과정을 밝힘으로써 1970~80년대 민중론의 본격적 전개와 역사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1960년대 이전 민중의 용례

1) 식민지기 민중 용례

治者群의 교육에 대한 정신이 단순히 『服從의 道德』을 강요하는 데만 있다할진대 개성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민중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정도의 힘을 다하여 그를 억압하기에 노력할 것이지만은 현대의 國家的 생활은 大衆 그들을 어떠한 정도까지 教養하지 안코는 그들 治者群 또는 優越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爭先하여 『必要한 程度의 教育』의 보급을 務圖함을 마지 안케 되었스니 그는 즉 군대와 産業勞動者의 필요로 썬인 바 현대의 소위 文明國으로서 普通教育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著大치 안흔 데가 업는 所以가 이에 잇는 것이다(주중건 1925, 14).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일제시기 지식인 층에서 민중은 치자(治者)의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대중과 거의 중차가 없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지식인들에게 민중은 현대의 국가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될 존재였다. 즉 계몽주의 기획에 따라 민중

은 계몽대상으로서 문명국에 필요한 노동자와 군대의 충원요소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총독부의 용례와도 유사했다. 총독부 경무국이 발간하던 『경무회보』에 ‘민중처우와 경찰정신’, ‘민중의 경찰관(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 관보에도 민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통치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서의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신분제가 해체되고 만민평등의 근대세계에서 민중은 피치자 일만을 호명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한편 민중이 단순한 통치와 계몽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존재는 아니었다. 때로는 거대한 군중운동의 주체로 이해되기도 했으며 저항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해되었다.

世人이 다 가티 경탄하고 추억하는 바와 가티 距今 34년전 甲午 東學亂은 조선 有史以來의 처음 보는 一大 民衆運動으로 그 영향이 조선과 日淸등 동양대국은 물론이고 멀리 세계에 까지 미쳤든 것은 여기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²⁾

요컨대 식민지기 민중은 통치와 지배의 대상으로 계몽되어야 할 존재 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항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간직한 존재로 이해되었다. 전자가 지배층과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용례라면 후자는 사회주의 좌파 계열의 용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식민지기 민중은 인민과 혼용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까지 민중과 인민 개념 사이의 뚜렷한 종차나 용례상의 구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민족과 국민과 민중의 관계도 흥미롭다. 전시총동원체제로 들어가면서 총독부에서는 국민 개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민중은 그

2) 박달성, 1927, “드면錄!! 그 때에 이리했다면 지금 조선은 엇지 되었을까, 최초의 민중운동을 니르킨 동학당이 정치적 훈련만 잇섯드면,” 『별건곤』 제7호, 23쪽.

하위 범주로 배치된다고 보인다. 조선의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민족개념의 하위범주로 민중을 배치하는 용례가 나타난다. 요컨대 국민과 민족을 최대 범주로 한 민중의 포섭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었다.

2)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민중 용례

해방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좌우대립이었다. 정치적 폭발이라고 할 정도의 격렬한 좌우 대립구도에 따라 민중 역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것은 좌익진영이었다. 좌파 사회주의 계열은 인민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민중을 압도했다. 일각에서 민중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인민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주요 언설이나 당명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사실상 민중은 인민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인민당,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에서 보이듯이 인민은 좌파의 고유명사처럼 되었다.

좌익진영이 인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35년 코민테른 제7차대회에서 ‘인민전선’ 테제가 채택되면서 193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계열에서 인민 용어 사용빈도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³⁾

아울러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한편으로 민중은 식민지기 총독부 등 지배층의 피지배층 호명기호로 사용되었기에,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적 동원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개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좌익진영이 인민을 집중 사용하게 됨에 따라 민중은 커다란 동요를 보여주었다. 주요한 발화 주체 중의 하나였던 좌익세력이 탈락됨에

3) 인민은 영어 단어 people의 번역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민중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people’s front’가 민중전선 대신 인민전선으로 번역된 맥락은 자세하지 않다.

따라 민중은 우익 및 미군정의 용어로 고착되게 된 것이다. 정치적 계선과는 무관하게 당시 언론에서도 민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더 이상 좌파적인 지향을 담았다고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파 진영에서 민중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형적인 극우파였던 이종형의 '민중당' 창당에서 알 수 있듯이 우파들은 좌파의 인민에 대항해 의식적으로 민중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들이 주도하던 신문 중의 하나였던 『민중일보』도 우파 진영의 민중 선호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민중이 우파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중도 우파 계열까지 포함한 '민중동맹'은 그 일례가 된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해방 공간의 민중은 우파 및 중도파까지 아우르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군정 측에서도 인민보다는 민중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맥아더의 포고문 제1호는 '조선민중'이라고 호명하였으며 이후로도 미군정은 민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미군정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된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인물들은 민중을 선호하였다. 일례로 군정청 경무국장에 임명된 조병옥은 포부를 밝히면서 "경찰 본래의 사명은 치안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민중의 순전한 협력자인 경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자유신문 1945/10/27).

미군정 및 우익진영의 민중 선호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좌익 진영의 인민과의 대비이다. 좌익 진영이 일제히 인민을 사용하게 되면서 침예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우익 및 미군정이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식민지기 이래 민중의 용례이다. 앞서 보았듯이 총독부는 민중을 자주 사용하였고 이러한 지배자의 호명기호는 새로운 지배권력으로 등장한 미군정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해방공간 민중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론이었다. 당

시 언론들은 민중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언론의 민중 용례는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기 이래 민중은 피지배층 일반을 호명하는 대표적인 용어였고 언론은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번역문제였다. 미군정의 영어는 한국 기자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했는데, 통역을 통하기도 하였지만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언론의 대중계도 사명을 강조한 것을 일부 언론은 “민중을 위하여 개방하라고 말”한 것으로 번역했다(매일신보 1945/09/12). 이는 곧 그만큼 민중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해방공간에서 민중은 저항성 또는 운동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보인다. 가장 급진적이고 격렬한 변화를 추구했던 좌파의 집단주체 개념이 인민으로 집중되고 우익 및 미군정, 언론의 용례로 국한된 민중은 보수적 집단주체 또는 수동적 대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인민은 좌파의 소멸과 함께 정치적 공간에서 극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거의 금기어처럼 되었다.⁴⁾ 물론 지식인들의 글에서는 인민이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예컨대 근대적 정치사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민주권’은 드물지 않게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공간에서 인민이 유력한 집단주체로 호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인민이 실종된 상황에서 민중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발화 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배층이었다. 주지하듯이 1950년대 경찰의 모토는 ‘민중의 지팡이’였으며 이승만이 주도한 거리정치 주역 중

4) 유진오는 이러한 상황을 복한 쪽에 ‘인민’이란 용어를 빼앗긴 것으로 설명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일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보다 인민개념이 훨씬 더 적실한 데 좌파의 상투어가 됨으로써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애석해 한 것이다.

의 하나는 '민중자결단' 이었다. 1950년 12월 경찰은 "민중과 더불어 죽고 사는 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각 경찰서 및 파출소에 내걸게 했다(조선일보 1950/12/22).

이승만은 1954년 12월 10일 신당결성의 의도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당의 기반은 민중의 지지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54/12/11). 1956년 이승만의 대통령 출마를 요구하는 관변단체 중심의 시위운동에 대하여 당시 언론에서는 국민운동이라는 명칭과 함께 '민중운동'이라는 명명법을 같이 사용했다(동아일보 1956/03/10).

민중이 통치와 지배대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곧 계몽대상이 된다는 것이기도 했다. 서울대 교수 이상백은 민중의 구제를 위해 언론이 책임있는 대변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59/04/10). 허근조는 "민중은 우둔치 않다"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둔한 민중의 계몽이 강조되던 시대상황을 강조한 셈이었다(동아일보 1957/03/11). 계몽주의 기획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개항 이후 한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계몽주의를 강조했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도구는 변하였지만, 민중의 계몽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했다.

한편 민중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것은 공산권 지배층에 대한 저항주체로서의 민중이었다. 사실 195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면을 가장 많이 장식한 민중용례는 공산권 관련 기사였다. 기사내용들은 공산국가 지도부에 저항하는 '민중'을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인민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민중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집단주체로 호명되었던 것이다.⁵⁾ 사실상 반공 이데올로기의 민중 포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1950년부터 1970년도까지 조선일보 검색 결과 인민 개념은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 관련 용어로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민중이 대체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1950년대 민중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보여준 것은 함석헌이었다. 함석헌의 민중론은 1970년대 ‘씨알’ 개념 단계에 가서 본격적 내용을 갖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1950년대에도 민중을 자주 사용했다. 1950년대 함석헌은 대중, 민중, 백성, 서민, 민 등을 거의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 핵심 내용은 수난받는 주체이자, 종교적 영성을 간직한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함석헌은 1957년 “하나님과 민중. 둘이 하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발이 땅을 디디고 흙이 묻은 것, 그것이 곧 민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민중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되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었다.⁶⁾ 그렇기에 그의 민중인식은 “풍부한 종교적 영성에 기초”한 것이었다(정지석 2006, 129). 함석헌의 민중인식은 1970년대 ‘민중신학’ 계열의 민중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종교적 영성’에 기초한 것이었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봉암과 진보당이 사용한 민중이었다. 1956년 11월 10일 발표된 진보당 창당 선언문에는 국민(1회), 국민대중(3회), 동포(4회), 민족(3회), 근로인민(2회), 민중(1회), 근로민중(1회), 근로대중(2회), 피해대중(1회) 등의 집단주체 용어가 사용되었다(권대복 1985, 13-15).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실로 다양한 용어가 호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당의 집단주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진보당 강령 전문에서도 민중은 국민, 대중 등과 함께 혼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국민대중의 이익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민중의 집결체인 우리 당은 모든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이라는 문구에서 드러나듯 진보당은 다양한 집단 주체를 혼

6) 『함석헌 전집 3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147쪽(정지석, 2006, “함석헌의 민중사상과 민중신학,” 『신학사상』 제134집, 109쪽에서 재인용).

용했다(권대복 1985, 34). 인민과 함께 민중, 국민, 대중 등이 뒤섞인 용어법은 진보당의 성격과도 관련된다 하겠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던 조건하에서, 중간과 및 구 좌익출신들이 포함된 진보당이었기에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피해대중’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피해대중을 엄밀한 집단주체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한편 반공 이데올로기에 전유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1950년대 민중의 저항적 가능성을 주목하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롭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던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1950년대부터 자유 민주주의는 한국의 공식 지배담론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4·19로 확인되듯이 강력한 저항담론으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즉 1950년대 민주주의 담론의 확산은 민중을 새로운 방향으로 사유하게끔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손우성의 글은 당시 지식인들의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는 “신민은 법적으로 군주의 소유물이며 인민은 공산제도하의 노예 인간을 의미하며 국민은 국가제도하에 통제된 자기의사의 박약한 민중을 가리키며 민중은 지배자가 아닌 인간군상의 무질서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하였다(손우성 1956, 7). 이어서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민중의 기반은 대단히 위약”하다고 규정하고 “성격이 강하고 보편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국민”이나 주권자로서의 힘이 강력할 수 있다고 하여 계몽주의를 벗어 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어서 “민중의 각 개인이 진실한 자기 권익에 자각하여 (중략) 민중 전체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아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민중은 “자기를 억압하는 지배자를 용인하지 않으며 만일 있으면 거기 항쟁한다”고까지 하여 민중의 저항주체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중이 주권을 잡은 곳은 서구라파의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민중이 주권자가 되려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 입을 강조했다(손우성 1956, 7-8).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서구 근대정치를 전범으로 삼아 민중을 재산과 교양을 갖춘 ‘시민’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는 측면과, 대중이라는 무질서한 집합체로 보는 두 가지 인식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950년대 민중은 대중과 거의 종차가 없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함석헌이 ‘대중잡지’, ‘대중식당’ 등의 용어에서 나타나는 비하적 의미가 결국 민중을 무시하는 인식의 소치라고 비판할 정도로 대중과 민중은 구별없이 쓰였다(함석헌 1959). 그럼에도 손우성의 글에서는 억압에 대한 저항가능성, 주권자로서의 의미 등을 통해 민중이 단순한 ‘무질서한 집합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민중이 다수자를 재현할 수 있는 용어로 선택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 1960년대 민중 용어의 확산과 의미 변화

1960년대 초반까지 민중은 5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여전히 “소련 로스토프 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민중폭동”이란 제하의 사실을 게재하고 있었고(동아일보 1962/10/09), 1962년 1월 5일 서울시경 시무식에 참석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동아일보 1962/01/05).

그러나 4·19의 경험은 민중을 새롭게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4·19를 통해 민중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장면은 “三·一운동과 四·一九혁명이라는 두 민중봉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또 얼마나 민권수호에 용감하였나를 심증해 주는

민족혼의 찬연한 발로요”라고 주장했고(국민보 1961/03/22), 사상계는 4·19를 ‘민중의 승리’라고 규정했다(사상계 1960/06, 56).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산의거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격렬히 성토했다.

본협회는 경찰에 의한 비인도적인 대량살상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먼저 강경히 항의하여 그 책임을 묻는 바이며 또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민중을 대변하여 군세계 항쟁할 결의를 더 한층 새롭게 하는 바이다(동아일보 1960/03/20).

여전히 계몽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민중은 점차 중요한 사회적 실체로 인정되어갔다. 1960년 7월 23일에는 4월혁명시민협회 준비대회가 갑자기 조직명칭을 ‘4월혁명민중협회’로 변경하였다(동아일보 1960/07/24).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민중의 시대’라는 제하의 칼럼은 민중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제2공화국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도가 얕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민중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바랄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위인의 출현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계몽하여 문화수준을 높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김준섭, 동아일보 1961/01/09). 동아일보는 1960년 6월 2일부터 연 5회에 걸쳐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아서 슐리징거의 “현대사회와 영웅-민중이라는 새로운 위인”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여기서 슐레징거는 현대는 영웅이 사라진 시대이며 이는 영웅의 세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19 정세 속에서의 민중의 사용범위는 제한적이었고 언론, 대학생, 비판적 지식인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민중의 사회적 확산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학생층을 들 수 있었다. 학생층의 격문과 성명서 등에서 민중은 대단히 제한적인 용법을 보여주었다. 대학생 층에서는 간

간히 사용되기도 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 층에서는 민중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⁷⁾ 대신 학생층이 사용한 핵심 집단주체는 민족과 국민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각종 성명서, 결의문 등 총 24 건 30여 쪽의 자료에도 민중은 단 한 차례 사용된 것에 불과했고, 노동운동 진영도 마찬가지였다(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249-284).⁸⁾

한편 집단주체 용어와 관련해 4·19 정세의 특이했던 점은 인민의 부활이었다. 즉 혁신계열 및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인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인민이 공개 정치무대에 등장했던 예외적인 사례였다. ‘전국학생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대회’, ‘2·8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등의 선언문에서는 인민, 인민대중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293-328). 인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식인 사회의 이론적 개념으로 제한되어 사용되던 상황을 넘어 4·19 정세하 혁신계의 집단주체 호명기호로 재현된 것이었다.⁹⁾

이상을 통해 보건대 4·19 정세 속에서 민중의 확산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전 참가층을 망라해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민족과 국민이었고 시민도 상당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민중이 지식인, 언론, 대학생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상황의 반증으로 보인다. 특히 해방공간 좌파 계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혁신계열은 민중과 함께, 때로는 더 중요한 집단주체 개념으로 인민을 사용

7) 여기서 검토한 것은 학민사 편집실 편, 1983, 『4·19의 민중사』와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이 4·19 당시 모든 고등학생들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8) 교원노조 자료에서 사용된 것은 1960년 5월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 명의의 「전국 교원동지의 분기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에서 “민중은 우매하지 않고”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였다(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249).

9) 물론 인민개념이 가장 자주 거명되었던 경우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정을 보도하는 신문 외신란을 통해서였다.

했다. 이는 민중이 좌파 계열로도 확장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1964년과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일련의 정세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3사태 당시 학생층의 언어 또한 민족과 국민으로 요약되었다(6·3동지회 2001, 457-535). 대중, 백성, 소비대중 등의 용어도 사용되었으나 주된 용어는 조국과 민족이었다. 이화여대의 선언문은 ‘여성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6·3동지회 2001, 462). 민중이 사용된 경우는 1965년 7월 15일 발표된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한비연) 결의문에서 ‘민중을 기만 우롱하면서’라고 한 것과 “민중은 역사의 바탕이요”라고 한 연세대 결의문 정도였다.¹⁰⁾ 요컨대 6·3사태 당시 학생층에게 민중은 중요한 집단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민중은 여전히 지배와 저항 진영의 공동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지식인,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상층 언어의 성격이 짙었다. 즉 저항적 성격이 특화되지도 못했고 또 그 용례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1965년을 전후해 민중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 주게 되었다.

1960년대 민중론의 이해를 위해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민중당’의 창당과 잡지 『청맥』의 창간이었다. 한국 보수야당의 역사에서 ‘민중’과 같은 집단 주체를 당명에 직접 노출시킨 것은 민중당이 유일했다. 민중당 창당을 계기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민중 사용 빈도가 폭증하였다. 민중당 창당 이전인 1960년부터 1965년 4월까지 『조선일보』 검색결과 민중은 총 35회가 사용되었지만, 민중당 창당 이후인 1965년 4월부터 1967년 2월까지 총 950여 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정치권의 핵심 주체인 보수야당의 당명이었던만큼 민중은 거의 매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게 되었다.

민중당의 창당이 가지는 효과는 민중당 창당에 앞서 1964년 3월 10일 야당 및 재야인사들이 조직한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의 성

10) 「연세대학교 3·24선언문」(6·3동지회 2001, 461, 492).

명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성명서에서는 민중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조선일보 1964/03/10). 3월 17일 충무에서 진행된 ‘매국외교’ 규탄대회에서도 ‘국민의 쫓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민중은 사용되지 않았다(조선일보 1964/03/18). 그런데 1965년 5월부터 동 단체 명의로 개최된 일련의 집회 명칭은 ‘대일매국외교반대민중시위대회’였다(조선일보 1965/05/15; 05/29; 05/30). 야당의 주도로 결성된 조직이었지만, 민중당 창당 이전까지 민중이 중요한 집단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창당 이후 민중이 집중 부각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박정희 체제가 1965년을 마지막으로 민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집권 초기인 196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는 연설문에서 이따금 민중을 사용하였다. “예술은 어떤 특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며 민중 속에서 민중생활과 더불어 호흡하는 가운데 생활화되고…”와 같은 용례리든지, “국민운동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된 주체성을 찾자는 국민의 민중운동이요…”와 같은 용례에서 보이다시피 박정희는 민중을 특권층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¹¹⁾

그런데 1965년 이후 박정희 연설문에서는 더 이상 민중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¹²⁾ 대신 민족과 국민이 가장 중요한 집단주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국민과 민족은 박정희 연설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등장했지만, 민중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민중이 박정희 연설문에서 사라지게 된 직접적 이

11) 박정희, 「개천예술제 치사」(1962.11.15), 『대통령연설문집』 1, 316쪽; 「국민운동 중앙위원 위촉식 위촉사」(1963.3.5), 『대통령연설문집』 1, 392쪽.

12) 마지막 민중 용례가 나타난 것은 1965년 10월 9일의 「백제문화제 치사」에서였다. 여기서 박정희가 사용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 “민중 속에 뿌리를 박고 민중과 더불어 생활화된 문화라야 참다운 민족문화라는 사실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민중과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특수 계층의 독점물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의미의 민족문화가 될 수 없다는 것…”(『대통령연설문집』 1, 476쪽).

유는 민중당의 창당과 뒤이은 일련의 '민중대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쟁자가 당명으로 채택한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민중당의 창당에 대해 언론에서는 '민중의 기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곧 민중이 보수야당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¹³⁾ 그러나 보수야당 내에서 민중론이라 부를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중당은 민중을 위한 정당이다. 민중당은 이 나라 자유민주세력의 총집결체가 되기를 기약하는 정당이며, 민중당은 군사적 권력집단이자 부패한 특권도당인 박 정권과 정면 투쟁할 결의를 굳게 한 정당이다. 그러므로 민중당은 박 정권의 공포, 탄압정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전취하는 전위가 될 것이며, 민중당은 오늘의 비정을 가차없이 척결할 책임 완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참된 반공과 경제건설, 그리고 통일대업의 실현을 위한 민족의 주체가 될 것을 기약한다(합당선언문, 1965.5.3).

정강

1.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된다.
2. 우리는 일체의 독재를 배격하고 책임을 존중하는 대의정치체도를 바로세워 헌정의 질서를 확립한다.
3. 우리는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합리적 정책을 책정, 실시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13) 사설 「민중당의 창건 선언과 우리의 기대」 (조선일보 1965/05/04).

정책

독재정치, 군사정치, 과장된 민족적 민주주의의 도전과 난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¹⁴⁾

민중당의 선언문과 강령, 정책을 일별해 보건대, 민중은 핵심적 가치가 아니었다. 대의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 등이 중요한 가치로 설정되었고 그것을 담보할 집단주체의 핵심은 민중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더욱이 보수정당은 곧이어 창당된 신민당을 통해 대중경제론을 제기하면서 민중으로부터 멀어진다. 1967년 대선에서 제기된 신민당의 대중경제론은 집단주체의 핵심이 국민이었고 민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1965년 민중당의 창당과 짧은 생존은 한국야당사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것도 내용은 거의 없는 당명만의 민중담론이었다.

사실 민중당 이전에 한국의 주요 보수정당에서 민중이 주요한 집단주체로 호명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었다. 한민당, 자유당, 민국당, 공화당 등 주요 정당의 정강, 강령 등에 나타나는 집단주체는 민족과 국민이 압도적이었으며 민중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편집부편 1988). 이는 곧 민중이 엄밀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정강, 강령 등에서 언급 할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가능케 한다. 즉 민중은 서술적 차원에서 평이하게 대중, 백성, 서민 등과 중차없이 쓰이는 용어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당의 창당은 민중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한 야당 당명으로 사용되면서 민중은 지배권력의 호명기호 성격이 약화되고 저항적 집단주체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었다.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보수야당이 당명으로 채택할 정도로 민중이 광

14) 편집부 편, 『한국의 주요정당/사회단체 강령·정책』(시인사 1988), 208-209쪽.

15)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포퓰리즘적 대중정치를 시도했다고 보인다. 야당을 봉건 귀족, 특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은 그와 대비되는 민중의 자식이자 근대화를 추동할 새로운 세대임을 민족주의적 언설로 강조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그 효과는 무시 못할 정도

범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어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1963년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하던 야권은 군부세력의 대중정치에 맞설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다.¹⁵⁾ 따라서 민중당의 창당은 박정희 체제의 대중정치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에 당명 또한 그에 걸맞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민중의 확산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백낙청과 『창작과비평』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을 주창했으며 민중론의 중요한 담당자였다. 그런데 백낙청이 시민문학론을 발표한 것은 1969년이였다. 1970년대 직전까지도 『창작과비평』과 백낙청에게 민중은 핵심 집단주체로 상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문학론에서 사용된 민중은 시민의식으로 계몽되어야 할 수동적 대상에 불과한 정도였다. 예컨대 “대다수 민중과 소수의 선구적 지식인이 하나의 시민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민중은 시민의 틀 안에 갖혀 있는 존재였다(백낙청 1969, 484). 그렇기에 그에게 갑오농민전쟁은 “민중의 반봉건적 저항과 민족적 주체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농민은 “몽매성에 근거한 많은 반시민적 요소들 때문에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체가 된 진정한 시민의식을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질 뿐이었다(백낙청 1969, 485).

요컨대 이 시기까지 백낙청에게 민중은 시민을 위한 배경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60년대를 관류했다고 할 수 있었다. 민중은 그 자체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국민, 시민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민중당의 창당에서 보이듯이 1960년대 민중은 용례상으로 일정한 확산양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집단주체 개념으로 정립

였다고 보인다. 김승욱은 “쏟아지는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낯됐다”고 여겨 박정희에게 투표했고, 임현영은 “휘황찬란한 단언 ‘민족적 민주주의’ 때문에 아주 황홀해서” 박정희에게 투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까지 했다고 회고했다(김병익 외 죄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2, 46-8쪽).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상에 근거하건대 1960년대 대다수 지식인층에서 사용된 민중의 의미는 피지배층 일반을 의미하는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때로 저항주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민중은 주로 계몽대상으로 이해되었다.¹⁶⁾

간혹 민중의 잠재적 힘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중은 명료한 집단주체로 설명되지 않았다. 즉 민중은 시민의식으로 계몽되어야 하거나 민족적 자각, 국민적 책임감을 체득해야만 하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예컨대 ‘국민주권’ 과 ‘인민주권’ 은 사용되었지만 ‘민중주권’ 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은 국민, 인민에 비해 개념적 엄밀도나 정치적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용어였다.

1960년대 민중의 확산 배경에는 첫째,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중사회론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사상계』를 위시해서 대중사회, 시민사회를 다루는 다양한 기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중사회론은 미국 사회학계의 논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새로운 집단주체를 고민하게 만든 하나의 배경을 이룬다고 보인다. 둘째는, 4·19 정세 효과이다. 4·19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거대한 대중봉기였으며 저항 집단주체를 사유하게 한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세력조차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쿠데타를 ‘혁명’으로 명명하고 우파적 대중정치를 시도할 정도였다. 셋째는, 인민주권에 근거한 민주주의 담론의 확산이다. 인민주권 개념은 한국에서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국민의 무차별적 성격 때문에 국민의 다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징된 민중이 강화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인민주권은 한국에서 ‘국민주권’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민중은 다만 국민의 설명적 존재에 불과했음도 분명했다.

16) 일례로 『조선일보』에서는 동학을 설명하면서 “민중을 결속”, “민중의 선봉을 담당” 등의 용례를 보여주었다(조선일보 1964/03/10).

4. 『청맥』의 민중인식

1960년대 제한된 민중용례에 비추어 『청맥』의 존재는 독특했다. 『청맥』은 1964년 8월에 창간되어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이 터지면서 폐간된 잡지였다. 『청맥』은 통혁당 핵심 관련자인 김질락이 주도했다.¹⁷⁾ 『청맥』의 지면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었고 기존의 대표적 잡지였던 『사상계』와 구분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사상계』가 교양잡지 수준이었다면 『청맥』은 보다 심화된 논설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청맥』은 『사상계』의 교양수준에 만족할 수 없었던 지식인 독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맥』 지면에 등장하는 민중을 검토함으로써 1960년대 지식인 사회의 민중론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맥』 지면의 민중 분석을 위해 먼저 필진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맥』의 필진은 통혁당과 연관된 집단과 기성 필자, 그리고 새롭게 대두하고 있던 신진 연구자 등으로 대별된다. 기성 필진은 신상초, 황산덕, 임종철 등이었는데, 『사상계』 등을 통해 이미 필명을 날린 사람들로써 이들이 『청맥』에 게재하는 글들은 여타 잡지 게재물과 유사한 것들이었다. 신진 필진은 백낙청, 안병욱, 조동일 등 학업을 마쳤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젊은 세대들로 『청맥』 편집주인이었던 김질락, 학사주점을 운영하던 이문규 등에 의해 발탁된 필자들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집단은 통혁당과 연관된 필자들과 대학원생, 젊은 강사진 등의 신진 연구

17) 『청맥』은 통혁당과 밀접한 관련하에 발간되었다. 통혁당 핵심부는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잡지 발간을 모색해 편집인 김진환, 편집주간 김질락, 내용편집 이문규, 자금조달 김종태 등으로 역할분담해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잡지명은 신영복의 제안이었다고 한다(편집부 엮음 1989, 86). 창간호 발간 당시 국회의장 이효상, 공화당 국회의원 김용태와 전매청장 등이 축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외관상으로 『청맥』은 당시 지배권력과 별다른 마찰이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혁당의 합법 기관지라고도 하지만, 지면구성이나 글 내용에서 통혁당과의 직접 관련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들이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청맥』의 전반적인 민중용례를 확인해보자. 『청맥』의 지향을 밝힌 창간사의 핵심 집단주체 용어는 민족과 국민이었고 그 내용은 민족의 통일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민중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창간호에서 민중이 사용된 것은 특집으로 기획된 「아아 이 민족, 이 수난」에 포함된 김대상의 「일제 무단통치의 본질」이란 글에서였다. 여기서 김대상은 구한말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능한 양반정부와 강도적 일제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운동은 각종의 형태로 격화하여 갔고 해산병과 애국적 민중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하여 민중을 기술적 차원에서 사용하였다(김대상 1964, 43). 또한 이 글에서는 인민, 대중 등의 용어가 민중과 혼용되고 있어 민중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다. 창간호의 또 다른 글에서는 “민중들은 절대군주의 밥이다”라고 표현하여 피지배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철범 1964, 58).

창간사뿐만 아니라 확인가능한 『청맥』의 모든 권두언에서는 민중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성격상 권두언은 잡지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는 지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민중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맥』이 민중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요컨대 『청맥』 편집진 내에서 민중은 아직 뚜렷한 자기 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편집주간으로 사실상 『청맥』의 대표격이었던 김질락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질락의 글에서는 민중 용어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¹⁸⁾ 심지어 ‘민중의식의 현재화’라는 제하에 진행된 대담에서조차 김질락은 민중 용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담에 참석한 송복은 민중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김질락만은 예외였다.

18) 여기서 필자가 확인한 김질락의 글은 세 편 가량이다. 여기에 송복과의 대담을 포함하면 네 편이 된다. 현재 『청맥』은 모든 호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필자가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한 것이다.

대신 그는 국민, 대중, 민족 용어를 즐겨 사용했으며 민중이 사용될 법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국민과 대중이 사용되었다.

민중을 서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송건호는 박정희 정권의 4대 의혹 사건에 대한 반사적 저항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지성적 현실참여가 아니라 민중적 참여이며 본질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저항에 그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송건호 1964, 31). 여기서 민중은 지성에 대비되는 위치이자 본질이 아닌 현상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곧 민중 또는 민중적인 것이라는 게 즉자적이며 피상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민중은 적극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건호는 이어서 지성의 역할을 ‘민중에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식인의 계몽대상으로서의 민중을 상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송건호 1964, 32-33).

이는 다른 필자들도 비슷해서 『청맥』에서 민중은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보다 지배층 또는 엘리트 지식인 등과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이씨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띤 문화는 정치인들의 힘에 의하여서보다도 민중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었다”와 같은 용례가 그것이다(유홍렬 1964, 150).

『청맥』에서 논의된 민중의 모습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연구성과를 인용해 민중을 분석한 것이었다. 일본의 한 사회학자는 지배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동조성에 근거해 민중을 ①서민, ②시민, ③대중, ④인민으로 구분했다.¹⁹⁾ 임희섭은 이 연구에 근거해 민중이 대부분 “전통적 가치체계에 매여 있으며 지배에 대한 복종의 윤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봉건적, 식민지적 지배에다 전기적 상업자본주의적 지배’로 인해 2

19) 서민은 전통적 가치체계에 매몰된 존재이며 시민은 근대적 자의식에 눈뜬 존재, 대중은 고도로 독점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소외된 존재, 인민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의 관점에 따라 활동하려는 존재로 규정되었다(임희섭 1965, “서민의 과소육구”, 『청맥』 4월호, 157쪽).

중 3종의 속박하에 있다고 파악하였다(임희섭 1965, 158). 그렇기에 한국의 민중은 아직 ‘서민’ 단계에 놓여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앞으로 시민과 인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민중은 거의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일반 명사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인다. 즉 아직까지도 민중은 자기 고유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술적 표현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임희섭은 민중을 통해 민족적인 것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그는 “근대적 가치의 최후의 보루는 전근대적 기득권층이 아니라 일 반대중층”에 있음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근대적 가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연결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서민의 일상생활에서 흐르는 “민기(民氣)”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예컨대 중국을 대국으로 본 것은 양반층이며 ‘서민들은 퇴국놈이란 인식’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하고 나라와 지배층이 예측되었을 때에도 “민중은 쇠고랑을 찢어도, 징병, 징용에 끌려 갔어도 그들은 언제나 자유인”이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사는 바로 한국이 4천 년간 숨쉬어온 엄마의 품”이라는 규정을 내리게 되었다(임희섭 1964, 150-151).

『청맥』에서 민중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1965년경으로 보인다. 1965년 말경부터 『청맥』의 지면에는 ‘민중’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글들이 산견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 내용도 단순한 서술적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6년 7월호부터는 「민중과 문화창조」라는 제하의 연속 시리즈물이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의 편집자의 말에서는 “우리 문화의 전통을 귀족적인 문화창조와 민중적인 문화창조로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구분”이라고 규정하고 “민중들은 그들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듬어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은 우리 고유의 전통에 입각하여 문화를 창조했고 외국의 문화를 우리 것으로 용해”시켰음을 강조했다. 요컨대 “민중의 문화창조의 특색은 일을 통한 생활 속에서 실질적이며 풍자

와 해학이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나타나고 민족의 고난이 닳았을 때 항상 수난을 받아야 하는 민중과 천민 사이에 더 한층 뚜렷이 나타나곤 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²⁰⁾

이어서 1966년 8월호에서는 「민중의식의 현재화」라는 대담을 게재하였는데 민중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기사가 두 달 연속 게재된 것이었다. 대담자는 편집주간 김질락과 편집장 송복이었는데, 『청맥』 창간 2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송복은 “민중의식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역사의식, 그것은 항상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사과정에서 생성된 자주의식”이라고 규정하여 민중의식이 역사의식의 실체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것이 자주적인 것임을 주장하여 민중의식을 높게 평가하였다(김질락·송복 1966, 16).

앞에서 보았듯이 1965년은 공고롭게도 박정희 연설문에서 민중이 사라지고 보수야당 민중당이 창당되는 해였다. 1965년을 전후해 『청맥』 지면에서 민중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앞의 두 ‘사건’과 서로 관련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청맥』 지면에서 민중의 의미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필자가 이진영이었다.

『청맥』 필진 중에 민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필자는 이진영이었다.²¹⁾ 이진영은 1965년 『청맥』 11월호에 게재한 「민족운동의 담당자」를 통해 민중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이진영은 민중이 민족주의 운동의 핵심 역량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이 “시민계급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광범한 민중의 운동으로 결부될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민중이 민족주의 운동의 주력이 될 수

20) 「민중과 문화창조」(청맥 1966/07, 94-95).

21) 이진영은 『청맥』의 핵심 필진으로 활동하다 통혁당 사건과 관련되어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글은 비록 편수는 많지 않지만 1960년대 공개 지면에 나타난 글 중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피지배 민중의 반란 봉기”가 농민대중의 혁명운동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여 민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3·1운동이나 4·19도 민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한 그는 결국 “한국 민족주의의 모태는 동학운동에서부터 비롯하여 <굶주린 민중>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진영 1965, 94).

백낙청을 위시해 1960년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민중보다 시민 개념을 강조했음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은 다른 필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중에 대한 적극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진영이 (자유)민주주의 대신 급진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였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²²⁾ 그렇지만 이진영이 민중에 대해 전적인 신뢰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민중의 참여와 조직은 수평선상에서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민중의 자율적인 운동과 행위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민중은 또한 생활상의 곤란에 매몰되어 “고복격양(鼓腹擊壤) 상태에 빠져 있기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미래 민족주의 운동의 담당자는 “<위에서부터의> 지배층이나 <밑에서부터의> 민중에 의해 수행될 수 없고 오직 지식계급층 내지 학생층에 의해 그 운동의 추진이 기대된다”고 결론지었다(이진영 1965, 97-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영은 민족주의 운동이 “독립과 사회개혁을 요망하는 전 민중의 열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개진하였다(이진영 1965, 99).

이어서 1966년 3월호에 게재된 「지식인과 역사의식」이라는 글에서 지식인을 ‘선구적인 진리의 인간, 민중의 길잡이, 민족역사에서의 성실한 참여자’로 규정내리고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인

22) 통혁당과의 밀접한 관련을 생각하건대 이진영이 사회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공개 지면에 나타난 이진영의 주된 논지는 급진 민족주의 정도라고 판단된다.

텔리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인테리층 혹은 그들로부터 개념과 사유방법을 일상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의식층에게 있어 발견되는 현실의 도피경향, 비민중성, 정신적으로 귀족연하는 근성, 혹은 양반의식의 교양주의 등은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현실에 대한 인테리의 사회인식과 실천이 민중의 생활과 관계없이 또는 한국민족의 주체적인 파악과 연관성을 맺음이 없이 단순한 출세주의의 방편…

지금 인테리층은 민중과 세계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며 가능한 공통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특권적 지위에 연연하고 독점자본과 비민주적 조작에 추파를 던지고 민중의 저변생활 실태에는 무관심하려는…(이진영 1966a, 25, 28).

이 글의 주된 대상은 지식인이지만, 이진영은 지식인의 존재 근거를 민중과의 대비 속에서 구하고 있다. 비민중성이야말로 지식인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되었다. 그는 이러한 비민중성을 띤 지식인의 존재가 주로 미국의 영향임을 주장했다. 즉 ‘사회적 모순’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무시하고 인간심리에 주목하는 미국 사회과학의 영향이 한국의 지식인들을 민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다(이진영 1966a, 30). 이것을 그는 식민성의 문제로 접근했다. 즉 “식민지 통치의 공통방식은 식민지 사회를 소수의 기생특권상층과 다수 민중의 빈곤층으로 나누어 민족의 분열을 획책 조작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 다음 구세력과 민중의 대립을 강조했다(이진영 1966a, 36).

이곳에 전통적인 지배특권의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구세력과 침묵만 하고 있는 민중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이해의 대립과 조화할 수 없는 모순이 심화된다. 그러나 민중은 지배적인 구세력과 깊은 모순관계를 지

니고 있으면서도 민중 측에는 자체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집약하고 강력히 표현조직할 만한 역량이 불충분하거나 결여되어 있기가 보통이다(이진영 1966a, 37).

이진영은 식민지 사회의 기본적 대립구도를 ‘기생특권상층’과 ‘민중의 빈곤층’으로 설정했는데, 지식인은 바로 이 구도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구세력과 민중 간의 대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상정된 것이 바로 인텔리겐치아였다. “민중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비전과 이성적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에서도 이진영은 민중에 대한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를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다(이진영 1966a, 28). 그러나 지식인의 존재근거를 민중에게서 구하는 것은 분명 이전과 달라진 면으로 주목할만한 주장이었다. 즉 이전 글에서는 민족운동의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학생과 지식층에서 구하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지식인은 오직 민중을 통해서만 존재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현재 한국 민중과의 결합의 방법과 장에 있어 지식인은 뚜렷한 좌표 하나 세워놓지 못하고 민중과의 역사공유를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매물경향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귀족선량 대 천민이란 관념에 근거한 민중=천민 사상에서 연유… 역사는 특권 보수계급의 생각에 따라 자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역사창조에의 민중의 역할이란 육체노동자의 작업처럼 보잘것 없다는 귀족주의적 가치관단이나 소시민적 근성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민족역사에의 참여를 위한 민중의 대열에 자신을 고고하게 분리시키려는 전근대적인 역사 의식에서 오는 것(이진영 1966a, 37).

여기서 민중은 식민지 사회의 기본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주축이자 나

아가 역사의 주체임이 강조되었다. 즉 민중은 현실의 주축이자 역사의 주체이기에 지식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이진영은 변영과 민주주의 모두 민중의 빈곤 극복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민중의 의의를 절대화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우리의 과제인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변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든 요구는 우선 민중의 빈곤을 극복하고 대중의 생활을 근저에서부터 개선하려는 의지와 결합할 때 가장 거대한 민족사의 추동력을 민중으로부터 창출해낼 수 있으며 또한 민중의 근대적 의식도 자각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테리겐차란 민중에 앞장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민중의 복지를 위해 전위가 된다는 점과 민족사의 방향을 암중모색하는 기수가 된다는 점에 역사적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진영 1966a, 38).

여기서 민중은 자유, 평등, 진보, 변영, 민주주의 등 거의 모든 과제들의 핵심 준거집단으로 위치되고 있다. 즉 역사의 추동력이 민중이라는 주장이었다. 지식인 또한 오직 민중의 시중을 드는 존재, 민중의 전위가 됨으로써만 자기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렇기에 한국 지식인이 민중과 역사에 성실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첫째, 민중에 대해 계몽가적인 우월감과 지적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고, 다음으로 지식인 자신을 민중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여기서 지식인이 자기를 민중화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지식인이 자기의 사회적 문화적 전문적 특수기능을 방기해서 민중일 반 가운데로 자기를 해소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민중화한 지식인, 민중으로서의 지식인은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면 안 된다… 특권에 항거하며 민중에게 봉사함으로써 인테리겐차의 임무는 구체적인 생활문제에서부터 고차적인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변영의 문제,

민족자립문제로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리하여 민중으로서의 의식을 체현하는 지식인임과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민중이 되고자 하는 지식인은 대중의 민주주의적인 혁명투쟁 속에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의 중대함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이진영 1966a, 39).

이 지점에서 이진영은 단순한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를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는 한층 성숙하고 또 복잡한 것이 되었다. 지식인은 이제 단순히 민중의 전위로서 민중을 지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민중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또한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전문적 특수기능을 상실해서도 안 된다. 지식인은 단순하게 민중으로 전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기능을 유지하면서 민중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요컨대 민중을 중심으로 제 사회집단의 관계가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것이며 그 과정은 모든 사회세력의 민중으로의 환원이라는 단순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진영의 민중인식은 문화방면으로도 확장되었다. 그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 그 핵심을 민중문화로 인식했다. 즉 “문화가 역사와 민중과 현실에 뿌리를 박지 못할 때 그것은 자기 땅과 자기 겨레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국문물의 수입을 인정하되, 그 원칙은 “민족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민중이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이진영 1966b, 37). 그는 여기에서도 민중을 특권층 내지 지배계급과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논법을 구사했다. 그는 양반문화를 논하면서 “소수 특권층은 다수 민중의 생활과 문화와는 전혀 다른 별세계를 발전 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고려와 조선의 “소수 지배계급은 한문학, 한시조, 아악, 서예, 묵화 등 사치하고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귀족문화를 한문이란 언어 질서권의 민중부재 위에서 꽃피웠지만 다수 민중은 판소리, 민요, 설화, 농악, 민속무용 등 토착의 문화를 생생한 모어(母語)를 통해 발전시켰다”는 것이다(이진영 1966b, 35).

현대의 문화 역시 “세계 문화를 표방하는 외국의 고도문명이나 자본주의적 소비구조”에 근거한 것이자 “도시문화는 대부분의 민중의 생활과 오락 예술을 오도하고 있으며 왜곡된 방향으로 마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다(이진영 1966b, 40). 그렇기에 “민중의 심리적 독점지배를 자행하는 대중문화”는 “민주적 조직에 의해 민중을 위한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이진영 1966b, 44). 결론적으로 그에게 “문화창조의 결정적인 주체는 한국 민중 자신이지 매관자본이나 비인간적인 특권이나 외국자본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문화창조자’는 “오직 한국 민족의 모어를 통해 민중에게 모든 부자유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만 우리의 민족문화는 불사조와 같은 위대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분출할 수 있을 것”이었다(이진영 1966b, 47).

1950~60년대를 통틀어 공개 지면을 통해 민중을 이렇게 강조한 글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진영의 글은 1960년대 민중담론의 한 획을 그었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이진영의 민중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중은 피지배층이자 강력한 저항 주체로 상징되었다. 즉 소수 특권층, 지배층과 대비되는 다수 피지배층이면서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민중은 민족(주의)와 강하게 연계되었다. 이진영의 글 중에서 민중을 직접 주제로 다룬 것은 없었고 민족운동, 지식인, 문화를 다루면서 민중을 언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민족(주의)와의 관련 하에서 민중을 다루고 있음이 눈에 띄었다. 즉 그에게 민중은 그 자체로 의미화되기보다는 민족의 실체, 민족문화의 핵심 담당층 등의 의미로 배치되었다.

셋째, 민중의 구체적 설명은 대단히 취약한 특징을 가졌다. 민중의 계급·계층적 구성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민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거의 없었다. 당시 학생층에서는 민중으로 볼 수 있는 계급·계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한일회담을 둘러싼 정세 속에서 한 대학생 단

체는 매관자본의 위험을 분석하면서 “농민·노동자·소시민은 그들(매관자본·인용자 주)의 초과기근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하거나 “농민·어민·노동자·소시민 등이 식견의 부족이나 장해조건으로 말미암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²³⁾ 즉 농민, 노동자, 소시민 등에 대한 언급은 민중의 구체적 설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진영에게 민중은 다만 지배층, 지식인, 민족 등과 관계 속에서 대상적으로 설명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는 이진영이 민중을 인민의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명료한 민중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넷째, 민중에 대한 강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적 태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계몽주의는 한국 지식인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진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5년 말 학생을 민족운동의 담당자로 보았던 입장은 이후 많이 약화되어 지식인 자체가 민중으로 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민중은 전위, 지식층에 의해 지도 계몽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렇다면 1960년대 『청맥』에 출현한 민중은 1970년대의 그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1970년대의 민중은 『청맥』에 출현한 민중과 연속과 단절의 이중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인민’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민중은 기각되었지만, 피지배층 일반을 의미하면서 저항적 계기를 강하게 띤 민중은 더욱 강화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1970년대의 민중론이 1960년대 『청맥』에 등장했던 민중의 지양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보수야당의 당명으로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민중이란 용어를 차용해 거기에 적극적인 저항의 계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진영과 같은 『청맥』의 비판적 지식인들

23) 서울대 법대 한일문제연구소, “현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정당성,” 『사상계』 1965년 7월호 (『6·3학생운동사』, 5345쪽에서 재인용).

이라면, 1970년대는 그것을 계승하는 한편 ‘인민’이라는 좌파적 지향을 기각하면서 민중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1980년대의 민중론이 마르크스주의 영향하의 사회과학적 인식에 기반했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민중’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1970년대와 1980년대로 양분되어 전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60년대 『청맥』의 민중은 민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하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청맥』 지면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민족이었다. 민족을 주어로 놓고 민중, 대중이 뒤섞여 쓰이는 경우도 많았으며 결국 민중은 민족을 조건으로 한 개념으로 등장했다고 보인다. 즉 1970년대 이후 민중론이 민족주의와 긴밀히 연관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청맥』은 그것을 선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960년대 지식인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집단주체는 국민, 대중, 인민, 민중, 서민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운동 또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주로 호명되었던 것은 대중, 민중, 서민, 국민이었고, 이론 또는 이념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인민-국민-민중이었다.

4·19정세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실 정치-운동 영역에서 인민은 거의 완벽하게 추방되었고 오직 이론 영역에서만 호명되었다. 국민은 현실 정치-운동과 이념-이론 영역에 두루 사용되는 가장 일반화된 용어였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저항적 집단주체로 쓰이기에는 문체가 있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은 일제시기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용어였다. 둘째, 국민은 구성원 내부의 이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에 다수결의 정치인 민주주의의

주권자로 정립되기는 곤란했다. 이는 민족도 마찬가지였다.

대중은 상당한 정서적 호소력이 있는 용어였다. 그러나 무차별적 다수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명료한 집단주체 개념이 되기는 힘들었다. 비슷한 용어로 서민을 들 수 있었는데, 주로 선동 차원에서의 감성적 용어라고 보인다.

민중은 이러한 다양한 경쟁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었다. 비슷한 계열로 대중, 인민, 국민, 서민과 경합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민족과 밀접한 관련하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인, 엘리트, 특권층 등 지배층을 지칭하는 개념과 수직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렇게 종횡으로 연결된 개념들의 그물망 속에서 민중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민중은 현실 정치-운동에서 자주 사용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론 영역에서도 가끔 사용되기는 했지만, 인민에 비해 그 개념적 엄밀도가 떨어졌다. 예컨대 민중주권보다는 인민주권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점차 저항적 집단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중은 주로 지배층의 피지배층 호명기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60년대 들어와서 저항 주체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지만 4·19, 6·3 등을 거치면서도 민중이 저항 주체의 핵심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저항 주체는 국민과 민족 이었고 민중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민중의 확산과 저항주체화와 관련해 중요했던 시기는 1965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 해에 보수야당 민중당이 결성되었고 박정희 연설문에서 민중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잡지 『청맥』이 적극적으로 민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반대세력인 야당이 당명으로 채택한 민중을 지배층이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박정희 체제는 더 이상 민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수야당의 민중은 그 내용도 매우 빈약했고 자유 민주주의에 근거한 국민 개념

에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었다.

비판적 지식인의 대부분도 민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지배층 일반으로 지칭하는 서술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시민, 국민의 보조 용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백낙청의 ‘시민 문학론’을 들 수 있었다. 그에게 민중은 시민의식으로 계몽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민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청맥』의 일부 필진이었다. 『청맥』은 통혁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잡지였는데, 민중과 관련해서는 이진영의 글이 중요하다. 이진영은 민중을 직접 주제로 삼아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1950~60년대를 통틀어 가장 특징적으로 민중을 사용했다. 그에게 민중은 인민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마르크스주의 또는 급진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민중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지배층과의 날카로운 대비, 역사의 주체, 민족의 실체, 민족문화의 실질적 담지자, 현실 변혁의 핵심 역량 등의 의미로 민중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보수 야당 민중당이 민중의 정치사회적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면 『청맥』의 일부 필진은 그 개념의 급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60년대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은 ‘재현의 정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대를 거치며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대중사회적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익명의 균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 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4·19를 전후해 민주주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다수결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다. 민중은 다수결의 정치를 위한 가장 유력한 집단 주체 중의 하나로 등장했지만, 실체라기보다는 담론적 구성물에 가까웠다. 민중은 근대화, 민족문화,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계몽된 주체여야 되었고, 그 계몽의 주체는 그들을 대변하고 재현하며 결국 지배하게 될 것이었다. ~~이~~

참고문헌

- 권대복 엮음. 1985. 『진보당』. 지양사.
- 김대상. 1964. “일제 무단통치의 본질-그 탄압의 제양상.” 『청맥』 창간호. 42-50.
- 김병익 외 좌담. 2002.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 문학』. 창작과 비평사.
- 김준섭. 1961. “민중의 시대” (『동아일보』, 1961.01.09).
- 김질락·송복. 1966. “민중의식의 현재화: 대담.” 『청맥』 8월호. 10-17.
- 박달성. 1927. “드면錄!!그 때에 이리했다면 지금 조선은 엇지 되었을가. 최초의 민중운동을 니르킨 동학당이 정치적 훈련만 잇섯드면.” 『별건곤』 제7호. 22-25.
- 박은숙. 2008. “동도서기론자의 ‘民富國強’ 론과 민중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7-39.
- 백낙청. 1969.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여름호. 461-509.
-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 손우성. 1956. “대통령과 민중.” 『사상계』 10월호. 107-114.
- 송건호. 1964. “지성의 사회참여.” 『청맥』 11월호. 24-33.
- 6·3동지회 지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 유홍렬. 1964. “문화상으로 본 한국의 자주성.” 『청맥』 11월호. 144-151.
- 이진영. 1966a. “지식인과 역사의식.” 『청맥』 3월호. 24-39.
- _____. 1966b. “해방과 소비문화의 지배.” 『청맥』 6월호. 34-47.
- _____. 1965. “민족운동의 담당자.” 『청맥』 11월호. 84-99.
- 이철범. 1964. “민족적 수난과 한국민의 병리.” 『청맥』 창간호. 51-60.
- 임희섭. 1964.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화인가.” 『청맥』 12월호. 146-151.
- _____. 1965. “서민의 과소육구.” 『청맥』 4월호.
- 장상철. 2007.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재등장.”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114-138.

장훈교. 2008. “공간적 은유의 전환.” 『역사연구』 제18호. 31-61.
 전명혁. 2008. “‘민중사’ 논의와 새로운 모색.” 『역사연구』 제18호. 7-30.
 정지석. 2006. “함석헌의 민중사상과 민중신학.” 『신학사상』 제134집. 101-131.
 주중건. 1925. “현대의 교육과 민중.” 『개벽』 제58호. 12-16.
 학민사 편집실 편. 1983. 『4·19의 민중사』.
 함석헌. 1959. “씨알의 설음.” 『사상계』 12월호. 154-167.
 허영란. 2005.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역사문제연구』 제15호. 301-317.
 편집부 편. 1988. 『한국의 주요정당/사회단체 강령·정책』. 시인사.
 편집부 엮음. 1989. 『통혁당』. 대동.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투고: 2009.9.30 심사: 2009.10.16 확정: 2009.10.30